



## I. 일반현황

### 1. 개요

인천광역시는 2011. 1. 1. 현재 인구수는 275만 8,296명이며, 8개 자치구 2개군 1읍 19면 122개동 3,971통 21,238반의 행정구역체계를 가지고 있다. 면적은 1,029.42km<sup>2</sup>이며, 7대 도시 중 울산광역시에 이어 2위의 면적규모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면적상 북서부의 백령도에서 남서부의 덕적도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해역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인천공항의 개항으로 인천은 단순히 한반도의 해상 및 항공교통의 결절지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중심적 위치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렇듯 인천은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한반도에서 그 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으로 도약하고 있다.

## 2. 재정현황

인천광역시의 재정규모는 과거 10년 동안 연평균 10%이상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세(시세의 43% 수준)에 의존하는 구조상의 문제로 자체수입이 감소하였고, 시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5,439억원(7.7%)이 감소한 6조 5,637억원이다.

일반회계 주요 재정지표는 자체수입의 감소로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 70.0% 보다 1.5%포인트 하락한 68.5%이며, 재정자주도는 또한 전년도 76.7%에서 3.1%포인트 하락한 73.6%이다.

금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의 특징은 재정 건전성의 조기회복과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서민복지 · 보육, 교육 및 일자리창출사업 등은 확대하고, 행정조직 운영비나 행사성 경비 등 비용절감이 가능한 경비는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10%이상 절감 편성한 긴축예산이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적 재원배분과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위기극복 예산이다.

그리고, 최대 현안 중점과제인 아시안게임 준비와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확보에 투자우선순위를 두었고, 도시 인프라 구축과 영조물 건축 등을 위한 사업비는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소요예산의 일부를 확보하였다.

〈표 1-1〉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도	2010년도	증(△)감	증감률
<b>합 계</b>	<b>65,637</b>	<b>71,076</b>	<b>△5,439</b>	<b>△7.7</b>
<b>일 반 회 계</b>	<b>39,516</b>	<b>41,311</b>	<b>△1,795</b>	<b>△4.4</b>
<b>특 별 회 계</b>	<b>26,121</b>	<b>29,765</b>	<b>△3,644</b>	<b>△12.2</b>
공 기 업 특 별 회 계 <sup>1)</sup>	13,319	15,817	△2,498	△15.8
기 타 특 별 회 계 <sup>2)</sup>	12,802	13,948	△1,146	△8.2

\*주: 2010년말 기금조성 규모는 2,440억원(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기금)

1) 공기업특별회계는 4개사업(상수도, 하수도,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을 설치 · 운영 중

2) 기타특별회계는 18개사업(학교용지, 인천대, 의료급여기금, 구획정리, 도시교통, 광역교통, 도시철도, 아시아경기대회 등)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우리시 최대 현안인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건설과 도시철도 등 인프라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기 위해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의 경우 지난해에는 4,488억원이 소요되었으나 대부분 토지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서구 주경기장 등 8개 경기장 건축공사비, Vision 2014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지원과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3,582억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금년까지 45%공정목표로 3,686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이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민선5기 대시민 약속사업인 3대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구)인천대학교 건물을 활용, 제물포 스마트 벤처타운을 조성하여 청년창업 및 벤처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하여 1만 2천명의 고용효과를 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 및 해외 인턴쉽 등 자립기반 구축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1,400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노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근로 지원을 위해 710억원을 투자하여 4만 7천여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6천억원을 융자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 확충 및 전시회, 시장개척, 투자유치 설명회 등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일반 보증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확대하고, 저신용 및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햇살론 사업을 통해 연 1만 2천명에게 혜택을 부여함은 물론 43개 전통시장의 가스안전 시설 보수,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서민경제 활력회복에 주력할 것이다.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5천억원을 투자하였다. 군·구 및 교육청과 함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중학생 학교운영비의 단계적 지원,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인천영어마을 운영, 장학기금 출연 등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교육환경 조성과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지역별로 집중 육성하여 우수한 중 · 고등학생들이 교육 때문에 인천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환경개선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인천대학교에도 학생 취업지원,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과 국립대 법인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도시 구현을 위해 셋째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으로 300만원씩 지급하고, 2012년 이후부터는 첫째아 및 둘째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무상보육분야는 셋째아 이상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과 만3세이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들의 양육수당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 45개소를 확충하고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보육사업에 2천 2백억원을 투자하여 현명한 어머니라면 인천에 와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도록 할 것이다.

## II. 재정운용상 문제점

2007년 미국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는 2008년 9월에 정점에 다다랐으며, 그 여파로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제상황 또한 매우 나빠져 이 파급효과가 전 세계에 이르고 있는 등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한 2008년 금융위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IMF외환위기 당시와 지금의 재정 위기는 내용이나 성격면에서 분명히 다르다. 과거에는 씹씹이를 줄이고 투자우선순위를 조정으로 위기극복이 가능하였다면 지금은 세수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위기 극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출구조가 변화하였으며, 재정규모나 행 · 재정적 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복지지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같은 꼭 필요한 정책은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저

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인위적인 증세(增稅)가 아니라 세원의 투명성 제고와 비과세 감면의 축소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된다.

### 1. 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자주 재원인 지방세<sup>3)</sup>의 경우 취득세 등 거래세가 세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을 점유<sup>4)</sup>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8년 이전까지 10년간 지방세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11.2%였으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2009년도에는 전년동기대비 0.8%의 세수 증가율을 보이는 데 그쳤다.

최근의 부동산 경기 동향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는 아파트 거래량 추이가 2010년 1월 중 전년동기 대비 101.5%로 잠시 상승한 다음, 부동산 시장의 주택가격 하락 우려 기조 확산 등에 따라 주택 거래가 위축되면서 2010년 2월말현재 전년동기대비 87.5%로 하락하였고, 이후 9개월간 지속적으로 주택거래가 급감하였다.

2010년 10월을 저점으로 다소 호전되고는 있으나,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따라 2010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 추세에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2010년 1월말현재 전년동기대비 146.0% 수준<sup>5)</sup>에서 2010년 2월말현재 전년동기 대비

3) 2011년 인천광역시 전체 예산 6조 5,637억 원 중 지방세입 예산이 2조 2,031억원으로 33.6% 점유

4) 2009년 인천광역시 지방세 징수액 2조 423억 원 중 취득세, 등록세가 8,553억원으로 41.9% 점유

5) 2010년 1월중 전년 대비 146.0%는 2009년 경기침체에 따른 반사효과(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129.9% 수준으로 증가폭이 점차 둔화되면서, 2010년 12월말현재는 전년동기 대비 102.2%의 징수 추이를 보이고 있다.

## 2. 세수 감소액 충당을 위한 회계간 내부거래 증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일반회계 자체수입이 2010년 당초예산편성 이후 6,358억원이 감소하는 등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위한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예약하여 부족재원을 조달한 관계로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발생하였고, 기금과 특별회계 예산도 목적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금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4년간 회계간 내부거래액은 총 8,807억원이며, 연평균 약 2,200억원을 기금과 특별회계 자금을 일시 융통하여 활용하고 있어 세수확충 등 근원적인 부족재원 해소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표 2-1〉 최근 4년간 일반회계 부족재원 조달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08년도 최종예산	2009년도 최종예산	2010년도 최종예산	2011년도 당초예산	비고
<b>합 계</b>	<b>8,807</b>	<b>1,590</b>	<b>3,101</b>	<b>2,275</b>	<b>1,841</b>	
특 별 회 계 자 금	6,321	920	2,401	1,800	1,200	
통 합 관 리 기 금	2,486	670	700	475	641	

## 3.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증가 및 지방비 부담 가중

금년도 인천광역시 본청 및 기초단체 사회복지비 비중은 일반회계 예산의 평균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이 높은 상위단체는 부평구로서 총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표 2-2〉 단체별 일반회계 사회복지비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시본청	중구	동구	남구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예산 규모	39,516	1,813	1,232	2,925	2,395	3,430	3,827	2,209	3,044	3,205	1,625
사회복지비	10,695	524	473	1,530	1,157	1,630	2,145	1,119	1,372	526	191
구성비	27.1	28.9	38.4	52.3	48.3	47.5	56.0	50.7	45.1	16.4	11.8

지방재정분권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분야에서는 2005년 실시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방으로 이양한 사업은 총 67개 사업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되는 것은 총 71개사업이다. 당시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예산은 5,858억원이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되는 사업예산은 4조 3,409억원 이었다.

예산상으로는 지방이양사업의 규모가 적은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지만 당시 국고보조사업 중 포괄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3조 7,259억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을 기억해 보면 사회복지사업의 상당한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이러한 지방재정, 복지에 대한 분권화는 운영비 및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의 상승분 반영 외에도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 다문화 가족 확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신규복지수요 증대, 주민의 예산편성과정의 참여 등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고부담사업 이외에도 자치단체 고유의 사회복지비 증가를 요구하고 있고, 사회복지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그 규모 축소가 쉽지 않은 실정으로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2009년도 사회복지비 분권사업 67개 사업 중 경상적 수요가 53개 사업이며, 총사업비의 67.4%를 차지하고 있다. 경상적 수요의 사회복지비는 시설의 운영비 및 종사자의 인건비가 대부분으로써 이 부분만 감안하더라도 매년 최소 3~5%가 증가가 불가피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 현실화, 표준인력 배치 등 운영기준을 중앙정부로부터 권고 받고 있으나, 이러한 부족 수요액을 부분적으로 지방비

6) 지은구(2007), 지방분권시대의 사회복지재정의 현주소, 『사회과학논총』, 제26집 2호.

로 충당하며, 해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 복지시설 확충, 사회 구조변화에 따른 신규 복지수요발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 한계 및 지역격차에 따른 복지수혜자의 불만 초래로 이어 질 뿐만 아니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정착 등으로 즉각적인 수요의 요청을 감안한다면 지방이양사업 예산지원 확대가 절실한 만큼 현재의 지방이양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복지분야 수요의 급증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복지분야에 대한 재원조달은 중앙정부가 전담하고, 지방정부는 서비스 공급만을 담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 있다고 판단된다.

### III. 재정운용 건전성 · 효율성 제고 노력

#### 1. 지방세 징수 강화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방세 징수 강화를 위하여 “체납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 한다는 각오로 과년도 체납정리 목표액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그 동안의 체납처분은 압류, 공매 등 유재산자 위주였으나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귀중품 ·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 압류 · 공매 처분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고액 · 고질 체납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해 민간채권 추심기법을 도입하는 등 체납정리기동반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약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5개조 10명의 체납정리기동반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과 자치구에 배치됐던 세무직 수습직원 5명을 보강해 7개조 15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체납자의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차량 강제 견인, 공매처분 방식과 함께 계약직 공무원들이 제2금융권 등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최대한 살려 유체동산 압류와 사해행위 취소 등 적극적인 현장채권 추심기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광역시에서는 현재 수력발전(1992년), 원자력발전(2006년) 등에 불과하고 있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화력발전에도 적용하여 과세형평성 유지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관련 시·도 및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지방세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입법추진 중인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과 형평을 유지하여 화력발전량 1Kwh당 0.5원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법 추진 시 전국적으로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10개 시·도에서 연간 1,400억 원(인천광역시 26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 세출예산 구조조정 추진

재량적 지출예산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여 부족재원을 조달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였다. 2010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불요불급사업비와 경직성 경비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총 4,946억원을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2,518억원의 세출 예산을 삭감 편성하여 세수감소액 충당 액으로 1,177억을 활용하였고, 일자리창출 사업비 등 시책사업비로 1,341억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제3회 결산추경 예산에서는 2,428억원의 세출삭감을 추진하여 지방세 감소액 충당에 1,452억을 활용하였고, 필수경비 부족분 976억을 추가 편성하였다.

지난해 일반 및 특별회계 경직성 경비 절감실적은 2009년 대비 27.6% 감축(△433억원)하였으며, 경비별 절감 실적은 공공운영비 △11.9%, 자체행사비 △22.5%, 업무추진비 △6.6%, 민간경상보조 △53.2%, 민간단체보조 △46.9% 및 자산취득비 △35.7%를 절감하였다.

〈표 3-1〉 2010년도 주요 경직성 경비 절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년도 최종예산	2009년도 최종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13,720	156,976	△43,256	△27.6	
공 공 운 영 비	57,970	65,795	△7,825	△11.9	
자 체 행 사 비	4,833	6,238	△1,405	△22.5	
업 무 추 진 비	3,816	4,087	△271	△6.6	
민 간 보 상 금	2,307	4,929	△2,622	△53.2	
민 간 단 체 보 조	19,109	36,000	△16,891	△46.9	
자 산 취 득 비	25,685	39,927	△14,242	△35.7	

금년도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과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재량적 지출에 대하여 20%이상을 감축하여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계속사업은 토지보상률이나 공정률을 감안한 예산배정으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신규 SOC분야는 투자우선순위와 투·용자 심사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한 통합과 일몰제를 시행하고, 전시장 사업과 성과 미흡사업은 연도중이라도 예산집행을 유보하고 추경예산 감액을 통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지출 생산성 제고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적기 공급을 위하여 재량적 지출예산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감축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IV. 지방재정 제도개선 건의사항

##### 1. 화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입법 추진

화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 입법추진과 관련,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역자원시설세 과

세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입법추진 중인 개정법률안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 우려를 고려하여 부칙에 세율 적용 특례규정을 뒤 시행초기에는 1Kwh당 0.4원을 적용하고 매년 0.025원씩 늘려가기로 했고, kW당 CO2 배출량이 수력의 50배, 원자력의 88배나 많은 화력만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점 등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그간 화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 입법 추진을 위하여, 2010년 말 관련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협조 요청을 구하는 한편,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에서도 2011년 1월에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서,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간의 이견 해소를 통하여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입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고자 한다.

## 2.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요청

준공영제 도입 전 시내버스 사업자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경영적자로 사업포기상태이었고, 운수종사자는 고질적인 장기 임금체불 등 열악한 근무여건과 시민들은 운전기사의 불친절, 결행, 무정차 등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였다. 지하철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시설 투자정책의 정책적 한계와 부작용을 인식한 정부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5. 1월)하여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 증진하고,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버스준공영제는 민영과 공영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노선관리형, 수입금관리형, 위탁관리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선관리형은 버스노선의 면허 및 운영권을 정부(자자체)가 소유하고 버스운송사업자는 일정기간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운영권을 위임받아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수입금관리형은 정부(자자체)가 수입금을 관리하고 노선별 운송실적과 원가를 정산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도 원가만큼 배분하는 형태이며, 위탁관리형은 정부(자자체)가 버스운송사업조합, 법인 또는 민간 버스운송사업자에게 특정한 노선에 대해 차량구입, 손실보상 등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이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9. 1. 1부터 인천형 준공영제(수입금 개별관리방식)를 도입하였고, 2009. 8. 1부터는 수입금 공동관리방식을 추가도입하여 병행 시행중에 있다. 준공영제 참여업체 수는 총 37개업체이며, 177개 노선에 적용하여 시행중이며, 표준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공제한 후 발생한 적자액을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 · 환승제 시행 이후 인천지역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 규모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주된 원인은 과거에는 버스업체가 자유롭게 탄력적 배차를 하며 수익을 발생시켰는데, 준공영제는 언제 어느 때고 일정한 배차간격을 유지하는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빈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적자를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인천광역시의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2009년 시행 첫해는 연간 550억원 의 적자보전을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14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반회계 총투자 가용재원의 20%수준을 버스준공영제 단일사업에 배분하고 있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고 있으며,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표 4-1〉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평균증가율	비고
<b>합 계</b>	<b>550</b>	<b>962</b>	<b>1,140</b>	<b>46.5</b>	
준공영제 재정지원	276	467	551	43.6	
버스업체 환승무료 할인	113	150	157	18.7	
버스유류대 지원	51	50	50	-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110	295	382	98.2	

따라서, 버스준공영제 사업은 현재 수도권 3개 시 · 도를 포함한 전국 광역단체(울산 제외)에서 시행 중 있으므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개정(시내버스 노선운행 적자분 보전내용 신설)으로 국고보조금의 확대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3.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른 후속조치

지난해까지 16개 세목의 지방세를 금년부터는 11개로 세목으로 간소화 하였다. 중복과세로 통폐합 되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취득세와 재산세로 통합하였고, 유사세목 통합은 등록세 중 취득 무관 및 정액분과 면허세를 통합해서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통합해서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통합해서 자동차세로 하였다.

세목귀속 변동은 광역시세이었던 도시계획세와 취득 무관분 등록세를 자치구세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로 전환하여 세수를 자치구로 귀속하였다. 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에 따라 광역과 기초단체간 재정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도시계획세와 등록세(일부)의 세액 등을 비교·검토해서 조정하였으나,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수입으로 운영하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세입재원 소멸로 광역시의 주차장건설사업과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업비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10%) 이상의 금액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광역단체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광역단체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현행법령으로는 사무는 광역단체장 소관이나, 사업재원이 되는 재산세가 자치구에 귀속되는 관계로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사무처리권자나 비용문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광역시 본청의 세수감소액 보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도 필요하다. ☺